

70년 영남독식... 지역불균형·인사 편중 바로 잡아

박근혜 파면 새로운 대한민국 과제

중 적폐청산

국가 최고권력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상징적인 조문으로 평가됐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되살렸다. 무엇보다 1960년의 4·19혁명과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이 완결하지 못한 과업을 이뤘다.

하지만, 이를 끝으로 보는 시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드러난 적폐는 실로 참담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사들의 국정 개입과 전횡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했다. 권력자와 재벌 사이에 이뤄진 음습한 뒷거래는 개발독재 시절부터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고질적 정경유착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를 지방하는 권력 기관들이 대통령 권력 사유화에 동원됐다. 편법과 반칙에 익숙한 사고와 행동 양식, 나만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 불통과 배제, 차별과 박해의 폐습 등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촛불민심도 ‘탄핵 인용’에서 이제는 ‘적폐 청산’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처벌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불평등·비합리적 구조를

정경유착 끊고 ‘정권 친위대’ 검찰·국정원 수술 급선무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불평등·비합리적 구조 바꾸야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 후 시민사회·학계에서는 “60년 해묵은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에 파리를 뜯 모든 특권·차별과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다. 정경유착 문제를 이번만큼은 제대로 짚고 가자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권력을 도구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압박해서는 안 되고, 기업은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지역불균형과 인사 편중 등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만 기대지 말고 제도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부정 부패 못지않은 적폐는 지역차별이다. 건국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영남 정권이 권력이 독차지하면서 호남에 대한 예산과 인사 소외가 두드러지면 지역불균등 현상이 고질병으로 고착화됐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번에만 나타난 적폐가 단지 박근혜 정권 때의 실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광복 이후부터 여러 차례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썩어

쌓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적폐는 임기응변이나 임시변통으로 해소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탄핵 인용 이후 적폐 청산과 대통합이란 프레임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언뜻 보면 정치권이 적폐 청산과 대통합을 놓고 대립하는 듯 보이나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일 뿐 적폐 청산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적폐 청산이 인적 청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또 제도적 적폐 청산 하자는 것인지 등을 놓고 또 그 정도의 차이를 놓고 의견을 달릴 필요가 있다.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교육계·대학생단체·작가회의·노동계·보건의료계·언론계·법조계 등에서 적폐 청산 목소리가 크다. 그만큼 최순실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의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 자신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 등 연고에 기대지 말고 정책과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월 대선’...개표 분류기 점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대선’이 유력시되면서 13일 오후 광주시 선관위 직원들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개표 자동분류기 등을 시험가동해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법의 도리, 고통 따르지만 오래도록 이롭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사...박 전대통령·지지자 염두 메시지 ‘눈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자신의 퇴임사에서 현재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지자 측을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현재 청사에서 가진 퇴임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전날 내비친 것을 직접 언급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바로 잊고 그제 잠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털어놓았다. 이는 탄핵심판을 통한 헌정 대통령 파면이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고뇌를 보여주는 언급으로 이해된다.

그는 특히,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행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면서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날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이 이 진통의 아

픎이 클지라도...”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 대행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 대행은 현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비록 오늘이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당장은 현재 결정에 승복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고 더 성숙한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의 퇴장은 소소하고 담백했다. 13일 오후 2시 34분께 김이수(64·연수원 9기) 차기 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7명과 현재 직원 30여명이 청사 1층 중앙홀에 모였다. 잠시 후 재판관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이 권한대행이 내리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멋쩍은 표정으로 잠시 당황하던 이 대행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환송하러 나온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석

별의 아쉬움을 나눴다. 악수하는 내내 박수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김이수 재판관과 악수를 한 후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좌중을 둘러본 이 대행은 이내 돌아서서 준비된 차에 탑승했다.

미리 대기하던 3대의 차량이 순식간에 따라붙으면서 이 대행이 탄 차와 뒤섞였다. 오전부터 현재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탄핵반대 측 시위자들의 식한 경호 방식이었다.

일부는 현재를 빠져 나가는 이 대행을 응원했지만, 일부는 이 대행에게 야유를 퍼붓는 소리도 섞였다. 차량은 재빠르게 현재 앞 도로를 빠져나갔고, 군중도 잠시만에 흩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이 대행의 퇴임식은 간소하게 진행됐고 안전상의 문제로 이 대행의 가족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9분간의 짧은 퇴임사를 마친 이 대행은 청사 지하 구내식당에서 재판관들과 함께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재판관실에 머물며 6년 동안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정리했다. /연합뉴스

검찰 ‘민간인 박근혜’ 본격수사

특검 못봐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행적 찾을까

불소추 등 수사 제약 없어져 의혹 규명할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7시간 의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검찰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특검은 ‘7시간’ 문제를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성사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않아 이날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

지 못했고 세월호 침몰 전날부터 사고 당일 오전 10시 무렵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사이에 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현재는 청와대 관저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고 규정하고서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전부터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검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대상을 제약받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경우 더 포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의원의 중

동 진출 등에 관한 지원을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지 못한 상태다.

현재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현저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해 검찰이 의혹 규명이 나설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대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핵심 혐의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7시간 의혹 규명에는 출입기 기록을 포함해 청와대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이미 압수수색 시도를 두 차례 거부한 청와대 측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할지는 “노 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무안 출발 일본 기타큐슈 3일/4일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 062) 228-1199

[3월 26일 ~ 5월 12일] 매주 3회 출발

[2박 3일 일정] 매주 금/일 출발

[3박 4일 일정] 매주 화 출발

개주일 JKPF51_1	클래식 JKPF51_A
<p>초특가 필살기 기타큐슈/벵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4일</p> <p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2px;">총 상품가격 599,000원~</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JPY 3000 / 선택경비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성급 호텔 🕒 매주 화, 금, 일 출발 ✈ 티웨이 항공 🎁 특식 2회(무제한 고기뷔페, 돈뎀) 	<p>료칸 or 료칸 호텔 1박 기타큐슈/야마구치/후쿠오카 3일, 4일</p> <p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2px;">총 상품가격 799,000원~</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 선택경비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성급 호텔, 료칸 or 료칸 호텔 1박 🕒 매주 화, 금, 일 출발 ✈ 티웨이 항공 🎁 특식 3회(카와라소바 정식, 돈뎀, 호텔식 카이세키)

■ [여행상품 가격표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보험료, 관광여행기,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발생 시 있습니다.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합니다. 선택관광에 참여 안한 분은 선택관광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벤트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정사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충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등)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편함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2)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 여행 자재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